

투 자 권 유 준 칙

(장외파생상품용)

제정 2022. 12. 1

※ 본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중 장외파생상품 관련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한 것으로, 당행의 장외파생상품 업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은 ‘일반투자자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문투자자 및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I. 총칙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 2)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란 법 제5조에서 말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 3)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투자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 4)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5) “투자자정보”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말한다.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은행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투자자 구분 등

4. 거래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 확인

- 1) 임직원은 투자자의 거래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금소법 제2조 제9호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주권상장법인이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자로 본다.

Ⅲ. 투자권유 희망 여부에 따른 판매

6.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1) 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 2)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거래에 있어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6-1.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7.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1)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여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3)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8.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은행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Ⅲ-2. 투자권유

9. 투자권유 절차

- 1) 임직원은 은행이 정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
- 2) 임직원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 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해야 한다.
- 3) 임직원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을 투자권유 해서는 안 된다.

10.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 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

11.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1)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

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마.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바. 관계법령 등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III-3. 설명의무

12. 설명의무

-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 2) 임직원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3) 임직원은 1) 및 2)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임직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나. 법인인 전문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임직원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

6) 임직원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IV. 상품의 위험도 분류

13. 상품의 위험도 분류

은행은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가. 주의: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나. 경고: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다. 위험: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V.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4. 계약서류의 교부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교부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중 투자자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15.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16. 투자매매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3)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은행이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은행이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바.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